



개발도상국에 중국 기술에 대한 대안이 제공 되어야 한다

BY 타바사 앤더슨

타바사 앤더슨(tabatha@stanford.edu)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국제 사이버 정책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회사에서 지정학적 분석가로 일하고 있다. 이 글은 앤더슨의 견해를 담고 있다.

PacNet시리즈는 미일한 3국 차세대 지도자 대화의 일환으로 이 중요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4월, 미국은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인권과 민주적 가치가 미래의 기술 개발, 혁신 및 투자의 핵심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일본, 한국 및 기타 58개 서명국과 함께 기술 설계, 구현 및 확산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가치가 내재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미국과 동맹국은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미래를 세계의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방법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때다.

이 선언문이 발표된 다음 해에 미국 정부와 그 동맹국들은 인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둘러싼 다자간 행동 강령의 확립과 같이 자유주의 이상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국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수많은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민주적 기술 리더로서의 세계적 명성을 고려할 때 공유 지역 안팎으로 이러한 책임을 주도하기에 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양국은 블룸버그 혁신 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와 UN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를 통해 과학 기술 혁신의 경쟁력 있는 허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한국은 한국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신기술이 민주사회를 저해하지 않고 이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로 삼았다. 그러나 더 많은 국가를 글로벌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시스템에 영입하려는 이러한 역량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의 방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 세계 GDP 성장은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 달러로 인한 통화 가치 하락, 무역 수요 감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생활비 위기가 발생했다. 모든 국가가 실현되지 않은 성장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반면, 신흥 경제국들은 동일한 2020~2024 기간 내에 더 많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누적 생산량 손실은 15.6~18.3%인데 비해 신흥 경제국들의 누적 생산량 손실은 30.4~33.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고품질 기술 개발의 고르지 못한 확산을 반영한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5%가 '어떤 형태로든 연결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디지털 경제에서 분리되어 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들 중 상당수가 이미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가 팬데믹으로 인한 성장 정체기를 겪으며 얻게된 새로운 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존 부채를 계속해서 상환하려면 2026년까지 약 2조 5천억 달러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기술 기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일본, 한국 등이 포괄적인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면 이들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평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진화는 100조 달러의 기대 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등과 같은 규모가 큰 투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술 및 인프라 수요를 대규모로 충족시키려는 몇 안 되는 강대국 중 하나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인권과 자유주의적 가치의 보존을 전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다자간 개발 금융 제도, 규범 및 원칙을 희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해체함으로써 중국의 이익에 가장 이익이 되는 점점 더 반자유주의적인 이미지로 세계를 재편하려고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23년 뮌헨 안보 회의와 뒤이은 G7 히로시마 지도자 정상 회담 등 최근 국제 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제공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예를 들어, 2023년 뮌헨 안보 회의 보고서는 "중국

은 기술 권위주의 비전을 장려하려는 독재 국가 그룹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실현 가능한 기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근본적인 동기와 관계없이,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는 현대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 특정 행동, 표준 및 규범이 내장되는 경향이 있다. 지속적인 정부 감시는 권위주의 방식 적용의 특징이다. 이는 사전 제작된 가상 "백도어"(중국 정부가 아프리카 연합 본부를 건설한 후 감시하기 위해 비밀리에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도어 등)와 중국의 2017년 국가 사이버 보안법(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의 광범위한 권한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제한된 개인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제한은 새롭게 디지털화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될 경우 인권에 해로울 수 있는 또 다른 표준이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규모의 채권자이자 투자자로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 유일한 국가임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진취적인 기술 기업을 통해 스마트 도시, 광섬유 케이블, 5G 및 기타 ICT 인프라를 포함하는 디지털 연결 프로젝트의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신흥 시장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화웨이, ZTE, 하이커비전, 샤오미와 같은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선점자로서의 중대한 이점을 취했다.

따라서 미국은 기술에 능숙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은 국가 기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의 기술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에 진입하는 동시에 민주적 가치에 더욱 부합하는 규범을 장려하는 데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삼성, 소니는 모두 디지털 혁신에 중요한 기본 인프라는 물론 고품질 기술 소비재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분야의 거대 기업들이다.

3국 그룹의 중요한 파트너십 잠재력이 있는 영역은 민주적 규범, 프로세스 또는 가치에 대한 상당한 헌신을 보여주는 아시아 전역의 현지 기술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공동 투자다. 미국이 주도하는 테크포데모크러시(Tech4Democracy)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현지 스타트업이 자금 지원과 승인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일련의 과제를 포함하며,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 맞게 특별히 맞춤형할 수 있는 준비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아시아 중심 버전은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에서 요구하는 가치 중심 기술 유형에 대한

풀뿌리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성공적인 테크포데모크러시 아시아(Tech4Democracy Asia) 참가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누리는 풍부한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의 혜택을 계속 누리게 되며, 결국 민주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중국의 옵션들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 기술들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들은 제시된 최종 '민주적 옵션'이 중국 기술에 대해 동등하게 비용적으로 감당 가능한 대안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신흥 경제국들을 더 넓은 강대국 경쟁 내에서 수동적인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개발의 주체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는 지속적인 대화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투자 국가의 민간 부문은 새롭고 의미 있는 방식들로 이러한 시장들에 참여하도록 장려되고 동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권위주의 국가보다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국가에 더 어려울 것이지만 결국 규범적인 영향을 미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국내 기술 부문들에 있어 오랫동안 민간 파트너십을 맺어온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활용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디지털 미래의 규범을 선언하는 것은 보완적인 행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또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은 분명히 수사만 앞서는 접근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현재 주로 고소득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기술로 신흥 시장을 풍요롭게 하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할 때까지 개발도상국들이 유일한 다른 옵션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담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은 투자와 경쟁을 열망하는 역동적인 지역에서 중국 기술에 대한 대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생각하는 차세대 기술 국가를 육성하는 것은 유망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러한 계획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상당한 시간, 돈,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저렴하고 준비된 기술을 얻으려면 중국이 선택해야 할 옵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PacNet*의 논평과 답변은 해당 작성자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대안적인 관점을 언제나 환영하고 장려합니다.